

2024년도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문제지

- 경 장 (1교시) -



성 명 :

응 시 번 호 :

응시자 유의사항

- ※ 경장(1교시) 시험 과목 : 형사소송법(08), 해사법규(09)
-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해 양 경 찰 청

형사소송법

1. 다음 중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속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 법원은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② 중국 북경시에 소재한 대한민국 영사관 내부에서 중국인이 사문서를 위조한 경우 우리나라 법원은 그 중국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다.
- ③ 내국 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외국에서 그 법인에 대한 횡령죄를 범한 경우 행위지 법률에 따르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 ④ 캐나다 시민권자인 피고인이 캐나다에서 위조 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 법원에 기소된 경우, 외국인 국외범이라도 우리나라에 재판권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다음 <보기> 중 대한민국 「헌법」에서 형사절차와 관련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 ㉢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 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3. 다음 중 실체적 진실주의의 제도적 표현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비상상고제도
- ② 자백보강법칙
- ③ 영장주의
- ④ 피고인 진술거부권의 고지

4. 다음 <보기> 중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그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하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 보 기 >

- ㉠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 ㉡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 현행범인 체포
- ㉣ 체포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 ㉤ 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 ㉥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을 포함한다)의 청구 또는 신청

- ① 3개
- ② 4개
- ③ 5개
- ④ 6개

5. 다음 중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항소심에 이르러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항소심에서도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 ②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에 관하여는 공범자 간에 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위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 사항이다.
- ④ 반의사불벌죄의 경우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의사능력이 있는 피해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피해자가 사망한 후 그 상속인이 피해자를 대신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다.

6. 다음 중 현행범인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으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하여야 하며, 여기서 ‘즉시’란 ‘정당한 이유없이 인도를 지연하거나 체포를 계속하는 등으로 불필요한 지체를 함이 없이’라는 의미이다.
 - ③ 사인(私人)이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수사기관에 인도한 경우 수사기관이 그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수사기관이 사인(私人)으로부터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현행범인을 직접 체포한 경우와는 달리 사인(私人)에 의해 체포된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된다.
7. 다음 중 압수물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가환부의 청구가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②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
 - ③ 범인으로부터 압수한 물품에 대하여 몰수의 선고가 없어 그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하더라도 공범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위하여 여전히 그 물품의 압수가 필요하다면 검사는 그 압수해제된 물품을 다시 압수할 수 있다.
 - ④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면, 이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해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도 함께 소멸하게 된다.

8. 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한다는 의사로 클라우드에 접속하기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하였더라도, 그 클라우드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③ 임의제출된 정보저장 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사후에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고 하여 그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④ 수사기관이 甲을 피의자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에 기하여 인터넷서비스업체인 A주식회사를 상대로 A주식회사의 본사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甲의 전자정보인 SNS 대화내용 등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실시한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甲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9. 다음 중 피의자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도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이의를 제기한 경우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였던 부분은 부당한 심증형성의 기초가 되지 않도록 삭제하여야 한다.
 -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변호인의 신문참여 및 그 제한에 관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0. 다음 중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은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한 후 그 전기통신의 보관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등의 승인을 청구하고, 검사는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관등을 승인하여야 한다.
 - ② 통신의 당사자 일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할 의도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자장치나 기계장치를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전기통신의 감청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전자우편이 송신되어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 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 ④ 통신기관등은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 등에 기재된 통신제한조치 대상자의 전화번호 등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전기통신에 사용되는 비밀번호를 누설할 수 없다.

11. 다음 중 불이익변경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자유형을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비록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유치기간이 자유형의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정식재판절차에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③ 검사가 공익적 지위 내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지위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도 불이익변경금지가 적용된다.
 - ④ 검사와 피고인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검사의 항소가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인하여 기각되더라도 불이익 변경금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12. 다음 중 공소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舊)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 제5항 본문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거일까지 발생한 범죄의 공소시효 기산일인 ‘선거일 후’는 ‘선거일 다음날’을 의미한다.
 - ②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2항은 공범 사이의 처벌에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의 제기로 다른 공범자에 대하여도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공범의 개념이나 유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 사이와 같은 대항범 역시 위 공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공소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의 ‘범죄행위’는 당해 범죄행위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 ④ 무고죄에 있어서 그 신고된 범죄사실이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이어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3. 다음 중 제척과 기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될 소송 진행은 그 피고사건의 실체적 재판에의 도달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의 소송절차를 말하고, 판결의 선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통역인이 피해자의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17조 제2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재심청구사건의 담당 법관이 재심대상 판결의 제1심에 관여한 경우, 그 법관은 제척 또는 기피의 원인인 전심재판에 관여한 것에 해당한다.
 - ④ 법관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고 그 후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에서 말하는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그 기초되는 조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14. 다음 중 진술거부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증거서류의 진정성립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여 진술을 거부한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를 낸 차의 운전자 등의 신고의무는 사고의 규모나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당사자의 개인적인 조치를 넘어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있는 것이다.
 - ③ 「헌법」상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므로, 진술거부권이 보장되는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을 권리를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 ④ 조사대상자의 진술내용이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그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15. 다음 중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적법절차의 원칙은 단순히 형사절차 상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권 제한과 관련되든 아니든 모든 입법작용 및 행정 작용에도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 ② 무죄추정의 원칙은 수사를 하는 단계 뿐만 아니라,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형사절차와 형사재판 전반을 이끄는 대원칙이다.
 - ③ 형사소송의 직권주의는 재판지연을 방지하여 능률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④ 형사소송에 있어서 수사를 담당하였던 경찰공무원은 증인의 지위에 있을 수 없으므로, 그 수사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증인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16. 다음 중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의 접견교통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 ②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형사소송법」 제34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법령에 의한 제한이 없더라도 수사기관의 처분은 물론 법원의 결정으로도 제한할 수 있다.
 - ④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수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지 아니한 채 피의자를 신문하여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은 없다.
17.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후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 ④ 검사와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18. 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수사기관이 구속 수감된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들은 다음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피고인과 통화하게 하고 그 범행에 관한 통화내용을 녹음하게 한 경우, 그 녹취록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 ②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는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 ③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위해 경찰서에 동행할 것을 요구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경찰차에 탑승하였고, 경찰서로 이동 중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그 직후 수사과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빨리 가자고 요구하였다면,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은 적법하고 그 후 이루어진 음주측정 결과는 증거능력이 있다.
 - ④ 제1심 법원에서 이미 증거능력이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능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심판의 기초가 될 수 있고, 다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

19.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긴급체포)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긴급체포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의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밝혀진 사정을 기초로 법원이 객관적으로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④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그 구속기간은 피의자를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

20. 다음 중 자백배제법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피의자신문조서에 기재된 피고인의 진술 및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 진술의 임의성을 다투면서 그것이 허위자백이라고 다투는 경우, 법원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임의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 ②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 증거조사를 마친 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 조서는 증거배제결정을 통하여 유죄인정의 자료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③ 피고인의 자백이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자백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수사기관에서의 신문절차에서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 행한 것이라면 이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인되어야 한다.
 - ④ 자백은 일단 자백하였다가 이를 번복 내지 취소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피고인이 항소이유서에 ‘돈이 급해 지어서는 안될 죄를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항소심 공판기일에 그 항소이유서를 진술하였다면, 이어진 검사의 신문에 범죄사실을 부인하였고 수사단계에서도 일관되게 범죄사실을 부인하여 온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1. 다음 중 사후적 구제제도로 보기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 전 피의자심문
 - ②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③ 강제처분에 대한 준항고
 - ④ 형사보상제도

22. 다음 중 약식명령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의 경우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②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에서 정한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 상향의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③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하거나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변호인에게도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한다.
- ④ 공범 중 1인에 대해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그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회복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의 기간 동안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범자에 대한 공소시효는 정지함이 없이 계속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3. 다음 중 즉결심판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은 즉결심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는 경우에도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때에는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②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으로부터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일한 소송행위이므로 별도의 공소제기 없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 ③ 즉결심판을 받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함으로써 공판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통상의 공판절차와 마찬가지로 국선변호인의 선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 ④ 법원이 경찰서장의 즉결심판 청구를 기각하여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이를 즉결심판에 대한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가 있는 사건으로 오인하여 그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한 경우, 공소제기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24. 다음 중 수사의 단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고소의 의사표시를 위한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 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다.
- ②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에서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장차 고소나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 하에서 행해졌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수사는 위법하지 않다.
- ③ 고소의 대상은 특정되어야 하므로 범인의 성명이 불명 또는 오기가 있다거나 범행일시, 장소,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거나 틀리는 경우에는 고소의 효력에 영향이 있다.
- ④ 변사자의 검시(檢屍)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므로 법관의 영장이 필요 없으며, 검시(檢屍)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

25. 다음 중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따른 불심검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에 대하여 질문을 할 때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흉기 이외의 소지품 검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 ② 불심검문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 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사전에 알려진 정보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한다.
- ④ 불심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가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당하는 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26. 다음 중 임의수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보호조치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음에도, 경찰관이 실제로는 범죄수사를 목적으로 피의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 조항의 피구호자로 삼아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관서에 데려간 행위는, 달리 현행범체포나 임의동행 등의 적법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② 수사기관이 수사의 필요상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경우에도 조사 후 귀가시키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에 반하여 경찰서 보호실 등에 계속 유치함으로써 신체의 자유를 속박하였다면 이는 구금에 해당한다.
 - ③ 피의자의 조사장소 도착시간, 조사개시 및 종료시간, 그 밖에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하거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한 후 수사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 ④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동행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이 사실상의 강제연행에 해당하더라도 임의동행 이후 긴급체포절차를 밟았다면, 긴급체포가 반드시 불법이라 볼 수 없으므로 법원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따로 심리하여 불법 여부를 밝혀야 한다.

27. 다음 중 「형사소송법」상 구속사유(피의자 구속)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②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③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
 - ④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28. 다음 중 영장에 의한 체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석방사실을 통지하고 그 통보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②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 ③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후 피의자를 체포하지 아니한 경우 검사는 변호인이 있는 때에는 피의자의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의 동거가족 중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④ 경찰관들이 체포를 하기 위한 실행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음에도,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경우라도 이러한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9. 다음 <보기>는 「형사소송법」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빈 칸에 들어갈 숫자의 합은?

< 보 기 >

- ㉠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 ㉡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 ㉢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3 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 사법경찰관은 「해양경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긴급체포 후 ()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 ① 120

② 108

③ 96

④ 84

30. 다음 중 형사절차상 진술의 영상녹화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게 영상녹화 사실을 알리고 영상녹화할 수 있다.
 - ②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이의의 진술을 별도로 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 ③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상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 ④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 진술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거부하더라도 영상녹화를 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자가 친권자 중 일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다음 중 수사의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의자의 진술은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조서를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진술한 때에는 이를 조서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② 마약류 사범인 수형자에게 마약류 반응검사를 위해 소변을 받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법관의 영장을 필요로 하는 강제처분이므로, 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소변채취가 법관의 영장없이 실시된 경우에는 영장주의 원칙에 반한다.
 - ③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을 한 경우에는, 그 촬영행위가 영장 없이 이루어졌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④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의수사로는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공무소 등에 대한 사실 조회, 감정·통역·번역의 위촉이 있다.

32. 다음 중 구속 전 피의자심문제도에 대한 다음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지체 없이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하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날의 다음날까지 심문하여야 한다.
 - ② 판사는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심문장소에 출석한 피해자 그 밖의 제3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 ③ 피의자에 대한 심문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검사와 변호인은 피의자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를 얻어 피의자를 심문할 수도 있다.
33. 다음 중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과 보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법원이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아니한 채 보석에 관한 결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결정이 적정한 이상,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만을 들어 그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보석이 취소된 경우 보증금납입을 포함한 모든 보석조건은 즉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 ③ 검사는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결정과 보석 허가결정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 ④ 보석취소결정을 비롯하여 고등법원이 한 최초 결정이 제1심 법원이 하였더라면 보통항고가 인정되는 결정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항고와 관련한 집행정지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34. 다음 중 수사상 감정유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감정유치는 감정을 목적으로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처분이므로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 즉 감정유치장을 요한다.
 - ② 피의자에 대한 감정유치 기간은 피의자의 구속 기간에 산입한다.
 - ③ 감정유치는 피의자나 피해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감정을 위하여 계속적인 유치와 관찰이 필요한 때에 인정된다.
 - ④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하여는 감정유치를 할 수 없다.

35. 다음 중 강제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의 해석에 있어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 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 있다.
- ② 피처분자가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서 그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등 영장 제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장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압수수색을 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③ 우편물 통관검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입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 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압수수색영장 없이 우편물의 개봉, 시료채취, 성분분석 등 검사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④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에 착수하면서 그 장소의 관리책임자에게 영장을 제시하였더라도,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를 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람에게도 따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36. 다음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영미법상 판례에 의해 확립된 증거법칙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일반적인 형사법의 대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 ② 비진술증거인 압수물은 압수절차가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물건 자체의 성질, 형태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어서 그 형태 등에 관한 증거 가치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 ③ 대법원은 위법수집증거에 의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 ④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라도 1차 증거수집과의 사이에 인과관계의 희석 또는 단절 여부를 중심으로 2차적 증거수집과 관련된 모든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에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37. 다음 중 변호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변호인 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하고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이와 같이 변호인이 되려는 자에게도 피의자를 접견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견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② 피압수자가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그 변호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2조의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 대한 통지규정에 따라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는 등으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기회를 별도로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③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 시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변호인 참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 변호인은 준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38. 다음 중 자백과 보강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의 여러 세대에서 7건의 절도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중 4건은 범행장소인 구체적 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사안에서, 위 4건에 관한 피고인 자백의 진실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피고인의 집에서 압수한 위 4건의 각 피해품에 대한 압수조서와 압수물 사진은 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된다.
- ②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자백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 ③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나,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진실성을 담보할 수 없으므로 공동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 ④ 공소장에 기재된 대마 흡연일자로부터 한달 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압수된 대마 잎은 비록 피고인의 자백이 구체적이고 그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39. 다음 중 전문증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건축허가를 둘러싼 A의 알선수재사건에서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내(B)가 사례비 2,000만원을 주기로 A와 상의하였다.”라는 B의 증언
 - ② 휴대전화기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C에 대한 공소사실의 유죄증거로 C의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위와 같은 내용의 정보
 - ③ 횡령죄로 기소된 D의 의뢰를 받은 변호사가 작성하여 D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법률의견서’를 출력한 사본
 - ④ 반국가단체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E의 컴퓨터에 저장된 국가기밀문건

40. 다음 중 전문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금된 피해자 A가 甲으로부터 풀려나는 당일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甲이 협박한 말을 포함하여 공갈 등 甲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내용을 문자로 보낸 경우, 이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촬영한 사진은 A의 진술서로 볼 수 없다.
 - ② 甲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한다.
 - ③ A가 B에게 행한 진술이 기재된 서류가 A가 그러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A의 B에 대한 진술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 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서류는 전문증거에 해당한다.
 - ④ A가 피해자들을 흥기로 살해하면서 “이것은 신의 명령을 집행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는데 이 말을 들은 B가 법정에서 A의 정신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그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이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사법규

1. 다음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선박위치통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업자제해역에 들어하는 어선은 1일 2회, 특정해역에 들어하는 어선은 1일 3회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 ② 특정해역에 들어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특정해역 외의 경우에는 출항지를 관할하는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 ③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에 따른 통지 외에 추가로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특보 발효 이후 출항한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통지해야 한다.
- ④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풍랑특보 발효시에는 매 12시간 간격으로, 태풍특보 발효시에는 매 4시간 간격으로 추가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2. 다음 <보기>에서 「항만운송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안에 들어갈 단어를 순서대로 가장 옳게 나열한 것은?

< 보 기 >

(㉠)을 하려는 자는 항만별·업종별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용품공급업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을/를 하여야 한다.

(㉣)을 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관리청에 (㉤)하여야 한다.

- ① ㉠ 항만운송사업 ㉡ 신청 ㉢ 등록
 ㉡ 항만운송관련사업 ㉢ 등록
- ② ㉠ 항만운송사업 ㉡ 등록 ㉢ 신청
 ㉡ 항만운송관련사업 ㉢ 신고
- ③ ㉠ 항만운송관련사업 ㉡ 신고 ㉢ 등록
 ㉡ 항만운송사업 ㉢ 신청
- ④ ㉠ 항만운송관련사업 ㉡ 등록 ㉢ 신고
 ㉡ 항만운송사업 ㉢ 등록

3. 다음 중 「도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강제 도선 대상 선박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600톤인 선박
- ② 대한민국 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총톤수 300톤인 선박
- ③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선박으로서 총톤수 1,500톤인 선박
- ④ 예선(총톤수 100톤)에 결합된 부선(총톤수 900톤)
(단, 국제항해에 취항하지 아니하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으로 한정한다)

4. 다음 중 「낙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낙시어선업자 등이 하여서는 아니되는 행동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70세 이상의 고령자를 승선하게 하는 행위
- ②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4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승선을 하게 하는 행위
- ③ 해상에서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또는 약물복용 상태에서 낚시어선을 조종하는 행위
- ④ 정신질환자 등 승선 부적격자에 대해 승선을 하게 하는 행위

5. 다음 중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선박교통관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교통관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 ② 선박교통관제를 위한 시설의 구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③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④ 선박교통관제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6. 다음 중 「선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원의 징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직무를 게을리 하거나 다른 해원의 직무수행을 방해하였을 경우 해원을 징계할 수 있다.
- ② 선장은 해원을 징계할 경우에는 미리 5명(해원의 수가 10명 이내인 경우에는 3명) 이상의 해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결을 거쳐야 한다.
- ③ 상륙금지는 정박 중에 10일 이내로 한다.
- ④ 징계의 종류에는 훈계, 업무정지, 하선 3종이 있다.

7. 다음 중 「어촌·어항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항의 종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어항
- ② 지역어항
- ③ 지방어항
- ④ 마을공동어항

8.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연안어업의 종류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낚시어업
- ② 트롤어업
- ③ 패류껍질어업
- ④ 손꽂치어업

9. 다음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사업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 등에 대한 내용이다. (가), (나), (다)의 합으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 ㉠ 유선에는 승선정원의 (가)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를 갖추어야 한다.
- ㉡ 유선장에 통신장비를 갖추지 못한 유선(5톤 미만)이 90척일 때 (나)척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추어야 한다.
- ㉢ 승객정원이 11명인 유선이 45척일 때 최소 (다)명 이상의 인명구조요원을 두어야 한다.

- ① 130
- ② 125
- ③ 120
- ④ 115

10. 다음 중 「해양과학조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이 법은 해양광물자원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조사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관계 기관의 장은 외국인등이 해양과학조사에 대하여 허가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양과학조사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선·검색·나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③ 대한민국과 체결한 조약 또는 협정에 따라 해양과학조사 허가, 동의를 받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 해양과학조사 실시 예정일 1개월 전까지 조사계획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국방부장관이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과학조사의 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체없이 해양과학조사를 정지시켜야 한다. 다만, 정지의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해양과학조사를 다시 시작하도록 할 수 있다.

11. 다음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양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때 중앙수석조사관이나 조사관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공무원
- ② 시장·군수·구청장
- ③ 영사
- ④ 대사

12. 다음 중 「선박직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연안수역에서 조업하는 24톤 어선의 경우, 6급 항해사 면허를 보유한 선장이 소형선박의 기관과정 교육을 이수할 경우 기관장 없이 선장 및 기관장의 직무를 행할 수 있다.
- ② 평수구역을 항행하는 500톤급 여객선의 선장은 최저 4급 항해사 이상의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 ③ 면허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의 통지를 받은 해기사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면허증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정지기간이 끝나면 그 해기사에게 면허증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 ④ 국내의 조선소에서 건조 또는 개조되는 선박을 진수 시부터 인도 시까지 시운전하는 경우에는 제11조 및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만 적용한다.

13. 다음 중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종면허의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할 때, 면허증 소지자의 주소·거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알 수 없어 처분내용을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면허시험 응시원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 게시판에 14일간 공고함으로써 그 통지를 대신할 수 있다.
- ②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조종면허의 효력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 ③ 원칙적으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을 따른다.
- ④ 일반조종면허와 요트조종면허를 소지한 사람이 조종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 시 사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조종 또는 운항에 필요한 면허에 대해서만 취소하거나 효력정지처분을 해야 한다.

14.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구조본부의 장은 구난작업 현장의 안전관리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난작업 관계자에게 인력 및 장비의 보강, 인근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한 조치 등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구조본부의 장은 신고된 내용이 구난작업을 실시 하는데 미흡하거나 거짓 신고라 의심될 때에는 필요한 사항과 사실관계를 보완한 후 다시 신고 하게 하여야 한다.

③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및 내수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난된 선박등을 구난 하려는 자는 구난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구조본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 본부의 장의 요청으로 구난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기관에 소속된 선박이 조난된 선박등을 긴급히 구난하기 위하여 예인하는 경우, 예인하는 자는 조난된 선박등이 파손되거나 멸실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경우 조난된 선박등을 예인하는 자는 피예인선의 선장이나 소유자에게 그 뜻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15.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계선”이란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잠시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총톤수 20톤 이상의 선박이 불꽃이나 열이 발생하는 용접 등의 방법으로 선박의 연료탱크에서 수리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 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장애물)이 발생한 경우 해양경찰서장은 그 장애물의 소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④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해양사고·화재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무역항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조난선(遭難船)의 선장은 즉시 「항로표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다음 중 「해사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동력선(A선박)과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어선 (B선박)이 항행 중 마주치는 상태에 있는 경우 이행 해야 하는 동작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A선박에게만 B선박을 피할 의무가 있다.

② B선박에게만 A선박을 피할 의무가 있다.

③ A선박과 B선박은 각각 상대 선박의 좌현 쪽을 지나갈 수 있게 변침하여야 한다.

④ A선박과 B선박은 각각 좌현으로 변침하여야 한다.

17.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해상항행 보호조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연해수역에서만 실시한다.

② 선박등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다른 선박등의 항행 또는 입항, 출항 등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해상항행 보호조치는 선박 등의 선장에 대하여 경고, 이동, 해산 명령 등을 하는 것이다.

④ 선박등이 항구·포구 내외의 수역과 지정된 항로 에서 무리를 지어 장시간 점거하거나 항법상 정상적인 횡단방법을 일탈하여 다른 선박등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해상항행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18. 다음 중 「해양경찰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서 15년 이상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한 자로서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 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했던 사람 중에서 임명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제5항의 단서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감독의 중단을 건의하는 경우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해양경찰위원회의 위원이 정당에 가입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④ 경찰, 검찰, 국가정보원 직원 또는 군인의 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해양 경찰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9. 다음 중 「선박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해양경찰함정을 「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도상국에 무상양여를 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게 되므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말소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 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한국선박은 원칙적으로 선박국적증서 또는 임시 선박국적증서를 선박 안에 갖추어 두지 아니 하고서는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하거나 항행할 수 없다.
- ④ 한국선박의 소유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지방 해양수산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선박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20. 다음 <보기>의 ()에 들어갈 숫자로 가장 옳은 것은?

< 보 기 >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6조(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증서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선박검사증서 및 국제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중략...

1. 해당 선박이 정기검사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국제협약 검사를 받기 곤란한 장소에 있는 경우 : ()개월 이내

- ① 1
- ② 3
- ③ 5
- ④ 7

21.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 ① 면허어업
- ② 허가어업
- ③ 등록어업
- ④ 신고어업

22.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폐기물”이라 함은 해양에 배출되는 경우 그 상태로는 쓸 수 없게 되는 물질로서 해양환경에 해로운 결과를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물질(기름, 유해액체물질, 포장유해물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② 선박오염물질기록부의 보존기간은 최초기재를 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③ 검사대상선박의 소유자가 해양오염방지설비등을 교체·개조 또는 수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오염 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우려가 있거나 배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긴급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3. 다음 중 「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할 수 있는 경우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선박이 해외파병과 원조를 준비하며 부두에서 기름(선박연료유)을 받는 중 밸브조작 잘못으로 계속 기름이 넘쳐 경유 500리터가 바다로 흘러 가게 된 경우
- ②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오염사고에 있어 해양 수산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오염피해를 최소화 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③ 선박 또는 해양시설 등의 안전확보나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 ④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24. 다음 중 「해운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만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는 경우 해운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분증 제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하여야 한다.
- ③ 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 발급내역과 여객명부를 3개월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외국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가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면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5. 다음 <보기> 중 「어선안전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 보 기 >
- ㉠ “조업자제해역”이란 동해 및 서해의 조업 한계선 이남해역 중 어선의 조업과 항행이 제한된 해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을 말한다.

㉡ “조업한계선”이란 조업자제해역의 동해 및 서해의 북쪽한계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말한다.

㉢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한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신고기관의 장은 해상에 대하여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을 제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없음

26. 다음 중 「영해 및 접속수역법(시행령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를 초과하여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외국선박의 영해에서 허가없는 조사 또는 측량을 한 경우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을 몰수할 수 있다.

③ 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하여야 한다.

④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항 3일전까지(공휴일을 포함한다) 외교부장관에게 통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군함 또는 선박이 통과하는 수역이 국제 항행에 이용되는 해협으로서 해당 수역에 공해대가 없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7. 다음 중 「낙시 관리 및 육성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낙시터업 허가에 대해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낙시터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낙시터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낙시터업을 한 경우

③ 영업정지 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④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8. 다음 중 「어선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길이 24미터 이상의 어선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항행검사를 받고 항행하는 어선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선은 만재흘수선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어선법」 제3조의2 제4항에 따라 복원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은 선장은 해당 자료를 어선 안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국제협약의 적용을 받는 어선의 경우 그 협약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과 다를 때에는 해당 국제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설치하는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29.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방파제에서 낙시 중 추락한 경우 연안사고에 해당한다.

② 해수욕장에서 스노클링 중 익사한 경우 연안사고에 해당한다.

③ 어선에서 연안조업 중 바다로 추락하여 실종된 경우 연안사고에 해당한다.

④ 갯벌에서 수산생물 채취 중 밑물에 고립된 경우 연안사고에 해당한다.

30. 다음 중 「해양경찰법」상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들 위원 중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의를 요구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의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위원장은 재의요구가 있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사무는 해양경찰청에서 수행하되, 정치적 중립의 보장을 위한 사무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에서 수행한다.

31. 다음 <보기> 중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서 해서는 아니되는 행위는 모두 몇 개 인가?

< 보 기 >

- ㉠ 요금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 ㉡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 또는 선박 대여를 거부하는 행위
- ㉢ 항행구역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 ㉣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는 행위
- ㉤ 수상에 유류·분뇨·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32.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상 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양과학 조사는 주권적 권리에 해당한다.
- 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인공섬·시설 및 구조물의 설치·이용은 관할권에 해당한다.
- ③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활동은 주권적 권리에 해당한다.
-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천연자원의 탐사·개발·보존 및 관리는 주권적 권리에 해당한다.

33. 다음 중 「수산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어업면허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과 신청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을 합친 면적이 60헥타르 이상이 되는 자
- ②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③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 「수산업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어선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4. 다음 중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잠수작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사를 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경기를 허가하였을 때에는 해양경찰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관리청은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나 무역항의 수상구역 부근에서 선박의 항행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35. 다음 중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외국의 구조대가 수난구조활동을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영토 또는 상공에 진입허가를 요청하는 때에 허가권자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국방부장관
- ② 법무부장관
- ③ 외교부장관
- ④ 중앙구조본부의 장

36. 다음 중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한 선박 또는 위반한 선박의 선장이나 그 밖의 위반자를 나포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 선박의 선적국과 외교부장관에게 위반선박의 명칭 등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외국인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및 「수산자원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③ 외국인은 특정금지구역이 아닌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하려면 선박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어업활동 허가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대한민국 정부에 입어료를 내야 한다. 단, 입어료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37. 다음 중 「해양경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함정의 양여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해양경찰청장은 국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용도 폐지된 함정을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해당 개발도상국과의 외교·방위산업 분야에서의 협력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③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의 선정 기준과 방법 및 구체적인 양여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양여 대상 개발도상국을 선정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38. 다음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연안체험 신고 제외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7명인 수상형 체험활동

②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인 수상형 체험활동

③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11명인 일반형 체험활동

④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9명인 수중형 체험활동

39. 다음 <보기> 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대한 내용이다. () 안에 들어가야 할 숫자의 합으로 옳은 것은?

< 보 기 >

㉠ 총톤수 ()톤 이상의 선박은 선박교통관제를 실시하는 대상 선박이다.

㉡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선박교통관제구역을 출입하려는 때에는 해당 선박교통관제구역을 관할하는 선박교통관제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은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선박교통관제관서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명 이상의 여객을 운송할 수 있는 선박의 선장은 관제통신을 녹음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611 ② 613 ③ 511 ④ 513

40. 다음은 「수상레저안전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상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권자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 해양경찰서장

③ 시장·군수·구청장

④ 지방해양경찰청장